

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

- 행정안전부, 2024. 8

I 경제활력 제고

1 지역 활력 제고

1.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(지특법)

①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?

-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마련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며,
 -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방안*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부세, 양도세 산정 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
 - * 「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」(‘24.4.15.) :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종전의 1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
- 취득가액, 대상지역 등은 지방재정 여건과 재산세 1주택 특례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함



참 고

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

- (대상)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하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
- (지역)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수도권(접경지역 제외)·광역시(군지역 제외)를 제외한 83개 지역
 - ※ 1주택자가 기존주택과 동일한 인구감소지역내에서 추가 취득시 감면 제외
- (감면율) 취득세 최대 50%(법 25% + 조례 25%)
- (보유 의무) 취득일부터 3년간
 - ※ (예시)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인구감소지역인 남해시에서 3억 주택 구입 시
(現) 취득세 300만원 (=3억원 × 취득세율 1%) → (改) 150만원(= 최대 50% 감면 적용)

②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한지?

-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감면세액이 큰 규정을 적용
 - ※ (지특법 § 180) 동일한 과세대상·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세액이 큰 것을 적용
- 또한,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,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감면 적용 가능

참 고

생애 최초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비교

구분	인구감소지역 주택 감면	생애최초 주택 감면
감면 대상	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	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무주택자
취득가액 기준	3억원 이하	12억원 이하
감면율	50%(최대 150만원)	면제(최대 200만원)
지역제한	인구감소 지역 內	제한 없음

2.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(지특법)

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?

-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전·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

3. 법인·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(지특법)

① 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대상 및 연장 취지는?

-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,
 - 대도시내 법인(본점·주사무소) 및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(100%) 및 재산세(5년간100%, 3년간50%), 등록면허세(법인·부동산 등기100%)를 감면

4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(지특법)

① (의료시설) 의료시설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 연장 이유는?

-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

② (교육시설)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 연장 이유는?

-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인정되고
 -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재정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지속 필요

③ (문화시설 등)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과학관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취득세, 재산세 감면 연장 이유는?

-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질 제고,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 등 고려 시 감면 연장

5. 농·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(지특법)

① 귀농인의 농지 취득, 농·어업인의 사업소 등 농·어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?

- 농어촌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인구 유입과 1차 산업의 보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


2 기업 활력 제고

1.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지원(지방세법·령)

①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이유는?

- '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, 사업소분 기본세율(舊 균등분)의 징수방법이 부과지에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
 - 이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등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

②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하는 이유는?

- '19년 기준금액 상향(270만원→300만원) 이후 물가·임금이 상승된 점을 반영하여 면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

< 연도별 근로자 월 임금총액 >

(단위 : 만원)

연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월 임금총액	303	314	318	327	353	364

※ 출처: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(「통계법」 § 18에 따른 지정통계)

2. 부동산개발 정상화 지원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(지특법)

① (LH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) 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?

-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토지매입 후 정상화* 추진 중
 -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구조조정과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에 기여
 - *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LH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, 타 시행사·건설사 매각 추진
 - ※ 신규 LH 채권 발행(최대 3조원 규모), 기업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고, 해당 기업으로부터 LH가 토지소유권 확보
 - ※ (매입절차) ① 기재부 매입요청(→국토부) → ② 국토부 매입지시(→LH) → ③ 매입공고(LH)

② (PF정상화펀드의 PFV 부동산 취득) PF정상화펀드를 통한 PFV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감면을 신설한 이유는?

-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중단 및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PFV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, '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
※ (PF정상화펀드) 캠퍼스와 민간이 공동출자로 구성하되, 캠퍼스가 40%이상 출자한 경우로 한정

3.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(지특법)

① 금융기관 등*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이유는?
* 금융기관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정리금융회사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등

- 농협·수협조합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물경제로의 확산 차단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

II 민생안정 지원

1 출생 및 양육 지원

1.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(지특법)

① (다자녀 자동차 취득) 2자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?

-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(3→2자녀)하고 있는 추세*를 고려하여 감면 대상을 2자녀 양육가구로 확대
*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(국토부), 초등돌봄교실(교육부), 아이돌봄서비스(여가부), 문화시설 할인(문체부) 등도 다자녀 기준을 3자녀→2자녀로 확대



2. 어린이집·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(지특법, 지방세령)

① (어린이집 감면)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?

-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*했으나,
 - * 취득세 50, 재산세 100(도시지역분 포함)
-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,
 - 취득세 감면율도 50%에서 100%로 상향(재산세는 기존과 동일)

②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하는 이유는?

- 유치원 경영자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경영자를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,
 - 출생·양육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
 - ※ 현재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§ 79②에서 담배소매인, 연탄·양곡소매인, 노점상인, 유치원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분 면제를 규정

2 취약 계층 지원

1.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(지특법)

① 장애인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?

-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 유지할 필요

2.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및 연장(지특법)

① (신축 소형주택) 非아파트 소형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이유는?

- 1~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非아파트 소

형주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非아파트 공급확대에 기여함

② (생애최초 주택) 다가구주택, 연립·다세대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이유는?

-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, 급격히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
 - 생애 최초로 非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

3.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(지특법)

① (임대주택)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?

-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입주자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

② (임대주택) 임대형기숙사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?

-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,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임대형기숙사*의 주거사다리 역할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
* 「건축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2호라목 :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「민간임대주택법」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% 이상인 것

※ 임대형기숙사는 '23.2월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유형이 신설, '23.9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음



4.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(지특법)

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?

-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, 지분적립형 분양주택*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
 - *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(10~25%)만 내고 입주한 뒤, 공공주택사업자와 20~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

5.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(지방세령)

① 과세기준일(매년 1월 1일) 현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신고는 무엇인지?

- 현재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은 매년 1월 1일(과세기준일) 이전에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,
 - 앞으로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사실을 사후 신고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
 - ※ 국세청 폐업신고 사실 확인 시, 비과세 적용

6.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(지특법)

① 운송사업 감면의 연장 취지는 ?

- 서민 대중교통(노선버스·택시) 및 탄소중립 지원(전기·수소전기버스)을 위해 현행 수준의 감면 연장

7.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(지특법)

①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?

- 내진보강 의무기준 지속 강화에도 민간 건축물 내진 비율은 '23년 말 기준 16.7%*로 공공(78.1%)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,
 - * ('23년말, 국토부) 전국 714만동, 내진의무 대상 603만동 중 100만동 내진 확보(16.7%)
 - 지진대비 내진보강 중요성, 非의무대상의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지원 필요

요

※ (건축법 상 내진 의무) 모든 주택,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㎡ 이상 건축물

참 고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취득세, 재산세 감면

- (대상) 법령상 내진성능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
- (감면율) 취득세-내진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
재산세-5년간 세액의 50% 감면

- 또한,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(민간 '19년, 공공 '13년 도입)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현재 건축물 신축을 통해 인증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나,
- 증축·대수선 등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

III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1 납세자 권익 보호

1. 지자체 선정 대리인 등 요건 완화(기본법)

①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는?

- 납세자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하여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법인*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함

* 수입금액(매출액) 3억원 이하 또는 자산가액 5억원 이하

※ 국선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(기준금액 동일) : '24.4.1. 시행

② 배우자 등*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신청금액 기준을 상향(1천만원→2천만원)하는 이유는?

* 신청인 4촌 이내 혈족,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

-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배우자 등의 대리인 선임 기준이 올해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*



되었으므로,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간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

* 1천만원 미만 → 2천만원 미만(「국기법 시행령」 §62('24.2.29. 개정))

- 기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납세자들이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 기대

2.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개선(기본령)

①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을 변경하는 이유는?

- 국세 통보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시,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‘지자체장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’의 다음날로 규정되어,
 - 지자체장이 환급 결정 후 30일 내에만 환급하면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어 납세자 권익 보호 미흡
-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국세 통보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 직권경정 및 납세자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‘납부일’의 다음날로 개정

3.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(지방세령)

① 그간 10%를 유지해 오던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축소한 이유와 ‘25년부터 3%로 축소하려던 것을 다시 5% 조정하는 이유?

- 당초 조기 세원확보,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연납 시 공제제도를 도입('94년) 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징수율* 제고 효과 미미
 - * 자동차세 징수율은 '18년 93.9%, '19년 94.0%로, 전체 지방세 중 최하위
 - 또한 저금리 기조('20년 0.5%)가 지속되어 금리 대비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적 축소 결정
-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('20. 12월)하여, 2년간('21~'22) 유예 기간 후 '23년 7%, '24년 5%, '25년 이후 3%로 공제율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,
 - 공제율 인하가 처음 적용된 '23년 이후 고금리기준금리 3.5%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25년 이후 공제율을 상향 조정

2 국민 편의 증진

1.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(징수법)

①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1개월간 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이유는?

- 체납처분 중지의 주된 목적은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
 - 체납처분 중지 시 이해관계자에게는 별도의 통지 절차*가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절차를 생략하여 납세자 권리 지연 방지
- 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,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함(법 §64①)

구 분	현 행	개 정
체납처분 중지 절차	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→ 1개월간 공고 → 체납처분 중지	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→ (생략) → 체납처분 중지

2. 담배 폐기시 공제·환급 절차 간소화 (지방세법)

① 담배를 제조장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폐기시설로 이동해도 세액의 공제·환급 대상이 되는지?

- 현재는 담배를 폐기하여 세액 공제·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장 등으로 반입 후 폐기시설로 이동하여야만 하였으나,
- 앞으로는 제조장 등으로 반입하는 절차 없이 바로 폐기장소에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세액 공제·환급을 적용

3.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 (지방세령)

①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가 편리해지는 점은 무엇인지?

-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 납부한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면허부여기관 방문 시 납부확인서 등 준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재차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기관 간 납부사실 확



인을 통해 면허증서 발급이 가능

※ 면허증서 발급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

IV 합리·효율적 과세체계 구축

1 납세자 권익 보호

1.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(지방세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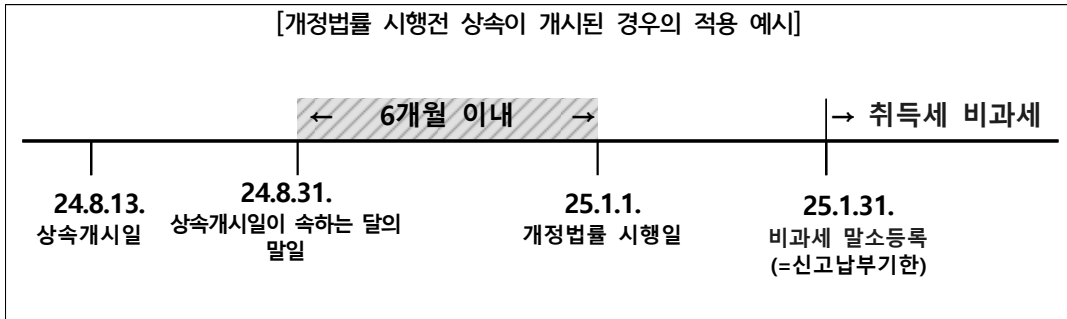
① 이번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?

- 현행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①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②과 상이해 납세자 혼선 등 발생
 - ※ ①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≠ 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- 이번 개정으로 상속 차량을 취득세 신고·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 과세체계 정합성 제고

② 개정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?

-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,
 - 개정법률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*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개정법률을 적용
 - * 외국에 주소지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
 - ※ 개정법률 부칙 제3조(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

[개정법률 시행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예시]



2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

1.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(지방세법)

① 신설 1년 이내에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소에 대해 과표공제를 확대하는 이유는?

- 신설 시 또는 신설 1년 이후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소와 달리 신설 1년 이내 초과 고용한 사업소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,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

2.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 합리화 (지특령)

① 선박 감면을 위한 사업등록 기한을 조정하는 이유는 ?

-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「해운법」에 따라 운송업과 선박대여업을 既등록한 자이어야 하나,
-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
- 감면 대상 간 과세 형평성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그 외 사업을 하려는 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사업	등록 근거법률	감면 대상 선박	취득 후 사업 등록 기한	
			현행	개선
운송업	해운법 (§4, §24)	내항 화물선	30일	30일
		외항 화물·여객선	-*	30일
선박 대여업	해운법 (§33)	내항 화물선	-*	30일
		외항 화물선	-*	30일

* 선박취득 전 사업등록이 완료된 자만 감면 대상